



난방비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다 에너지 기업들에 과세하라

최근 가스 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실내 온도를 낮추며 집 안에서도 옷을 몇 겹씩 끼입고, 온갖 방한용품 구입해 난방 사용량을 대폭 줄인 사람들도 지난해보다 늘어난 난방비에 허탈해 한다.

서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은 것은 정부가 지난해에 가스 요금을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가스 가격이 오르고,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가 9조 원에 이르다며 지난해에만 가스 요금을 4차례에 걸쳐 40퍼센트가량 올렸다.

올해 1월에도 역대급 한파가 이어지고 있어 다음 달에 고지되는 가스 요금은 더 불어날 공산이 크다.

게다가 지난해에 이미 20퍼센트가량 인상된 전기 요금이 올해 1월부터 추가로 9.5퍼센트 인상됐다. 가스 대신 전기로 난방을 하려 해도 전기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가장 가난한 취약계층은 난방도 못 하는 집에서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겨울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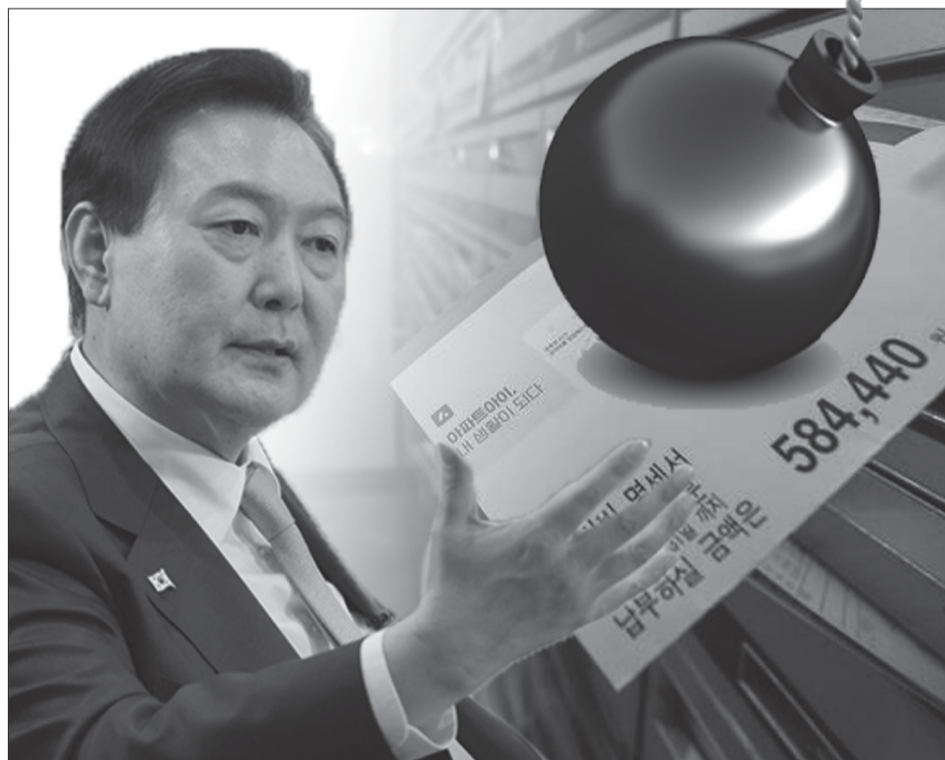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폭탄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들끓자 윤석열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다.

취약계층 117만 6000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로 18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가스공사는 가스 요금 할인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 주기도 못해 부족하다.

게다가 정부 대책에는 대다수 서민을 위한 대책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올 2분기에



또다시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하려 한다. 정부는 올해에도 가스 요금을 50~90퍼센트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연말이 되면 훨씬 더 큰 난방비 폭탄이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아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고 또다시 정부 탓을 하고 있다.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미미하게 올려 놔야 하는데 이 제서야 올리려 하니 폭탄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대다수 서민을 조삼모사에 휘둘리는 원숭이 취급하는 주장을 듣고 있다면, 현 정부에게는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가스 요금 인상을 지속하자, 관련 기업들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주가는 치솟았다.

정부는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핑계로 가스 요금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

지만, 이미 오른 가스 요금 덕에 가스공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삼천리·서울가스·대성에너지 등의 주가도 급등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가 무대적으로 일관하자 야당은 서민 지원책을 내놓으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퍼센트 이하 가구에 1인당 10만~25만 원씩 총 7조 2000억 원 지원, 정의당은 모든 가구에 난방비 30만 원씩 총 6조 원 지원, 진보당은 국민 1인당 10만 원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이들은 모두 에너지 기업들에 ‘횡재세’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자고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진보당이 서민 가스 요금 동결을 주장하고, 그동안 가스 요금 인상에 반대하지 않아 온 정의당이 이번에 보편적인 난방비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런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 동시에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중적 항의 투쟁이 건설되어야 한다.

지방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서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하며 평범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떠넘기자 각 지자체와 기업들도 덩달아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지하철·버스 요금을 각각 300~400원 인상하려 한다. 택시 기본요금도 내달 1일부터 1000원 인상된다. 다른 지자체들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상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주차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줄인상이 예고돼 있다.

라면, 우유 등 먹거리 가격은 이미 대폭 인상돼 서민의 시름을 깊게 만들었다.

서민들은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올 4월부터 맥주·막걸리 세금을 각각 리터당 30.5원(885.7원), 1.5원(44.4원) 인상한다. 주류업계는 이미 가격 인상을 준비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주범인 것이다.

<노동자 연대> 정규호에는

중대한 학전 위험에 직면한 우크라이나 전쟁 / 다보스 포럼에 모인 지배자들의 군색한 체제 변호 / 중동 전문가가 말하는 이란 반정부 시위 / 20년 전 송두율 교수 매녀사냥을 돌아보며 / 히틀러 총리 취임 90년 / 스탈린그라드 전투 종료 80년 등 유익하고 따끈따끈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간첩단' 몰이 윤석열의 자체 핵무장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

'간첩단'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우파 언론들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국적 조직도까지 그려가며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간첩단'의 존재가 기정사실인 양 퍼트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공안 사건 공격이 대공수사권 이관을 막으려는 국정원의 "조직보위적 위력 시위"라고 본다.

또는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때 '노조 때리기'로 재미를 보자 이를 좀 더 확대해 보려고 벌인 "오버액션"이라고 풀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공안 탄압의 실제 목적과 효과를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것이다.

지금 시점에 윤석열 정부가 공안 탄압에 나서려는 것은 무엇보다 남한 지배계급이 속도를 내고자 하는 안보 전략과 연관지어 봐야 한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만 해협 등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불안정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전통적 친미 국가인 동시에 중국의 주변국인 한국은 그 갈등에 깊숙이 연루돼 있다.

윤석열 정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군사 공조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여기에 북한 문제를 이용한다. 국경 밖에는 북한의 위협이, 국경 안에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다는 이유를 대면서 말이다.

1월 9일 <조선일보>가 '제주 간첩단' 사건을 단독 보도한 지 이틀 뒤, 윤석열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낸 배경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 안보 강화를 지지한다면 날로 첨예해지는 지정학적 불안정 속에서 공안 탄압에 일관되게 반대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북한 위협을 명분 삼고 국가 안전보장을 앞세우며 벌이는 일들은 실제로는 오히려 한반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일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장동 수사 확증도 없이 이재명을 부패 범죄자로 몰아가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1월 28일에는 서울 중앙지검이 이재명을 직접 소환했다.

지난해 10월 하순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할 때는 마치 대장동 비리 수익금이 이재명의 대선자금으로 흘러간 증거를 잡은 듯이 언론에 보도됐었다.

그러나 그 뒤로 석 달 간 그에 대한 확증은 없고, 대장동 비리 주범 중 유동규·남욱이 김만배에게 들었다는 진술만 나오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지난해 7월 대장동 수사팀이 교체돼 수사 방향을 이재명 캐기로 바꾸자,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이 달라진 것이다. 그리고 그 둘은 검찰이 구속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석방

됐다. 혐의만으로 김용과 정진상이 구속된 것과 달리 혐의가 확실한 주범들은 풀려난 것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 명목으로 요란하게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정작 정치자금법 위반보다는 배임죄를 핵심 혐의로 제기했다. 대장동 개발 수익의 너무 많은 부분은 민간 개발 업체들이 가져간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예상수익의 50퍼센트 이상을 시가 먼저 확보하는 조건으로 민간 업체의 수익에 한계선을 안 씌운 성남시의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공공성 있는 방식인가를 정치적으로 따질 수는 있어도) 부정부패라고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게다가 검찰은 소위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등이 대장동 일당의 초기자금 출처인 부산저축은행 부정 대출 의혹 건을 과거에 무마해 줬다는 의혹도 수사하지 않고 있다.

지금 대장동 수사가 정치 수사인 이유다.

윤석열 정부와 보수 언론의 속셈은 뻔하다. 윤석열을 반대하는 대중에게 대안 부재감을 안겨 줘, 개혁 염원 대중의 반윤석열 정서를 사기 저하시키려는 것이다.

아직 진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런 사악한 의도에 넘어가선 안 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orkersolidarity.org/join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아침에 읽는 <노동자연대> 구독하세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온라인 토론회

공정과 범치 내세운 윤석열의 노동개혁 - 무엇을 노리나?

노동자연대 TV

일시 2월 1일(수) 오후 8시
발제 박설 (조선업 위기와 구조조정 - 어떻게 맞설 것인가) 공저자

참가신청 bit.ly/0201-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 가능)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